

##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역사나눔1-2

## 우토로 재일조선인 문제

배지원 | 역사청산! 거주권보장!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

### 1. 우토로 개황

- 위치: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초 우토로 51번지
- 면적: 6,400평(약 21,000평방미터)
- 주민: 65세대 202명
- 주민구성: 65세 이상 고령자 20%, 독거노인세대 12세대, 생활보호세대 13세대, 후생연금수급자 2세대
- 주거환경: 1988년까지 우물 의존(현재에도 3분의1이 우물에만 의존), 하수시설 없음  
남쪽 방향으로 육상자위대 오쿠보주둔지와 접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위는 일반 일본인 주택가와 면하고 있음

### 2. 우토로지구 성립 역사

- 1940. 1 일본정부(체신성) 교토 군용비행장 용지 100만평을 좌산촌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으로 결정
- 1941. 7 국책사업을 추진할 군수기업 (주)일본국제항공공업 설립
- 1941. 8 교토부가 우토로 토지 매입  
조선인 동원 (최고 1300여명)  
조선인 노무자 집단합숙소로서 함바가 만들어지 시작
- 1945. 8 일본 패전, 비행장 건설 중지
- 1945. 9 미점령군(GHQ) 일본국제항공공업 접수  
우토로지구 주민의 저항으로 접수 실패  
민족학교가 자주적으로 건립됨(1949년 탄압에 의해 폐쇄)
- 1945. 12 일본국제항공공업사장 A급 전범 용의로 체포

### 3.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거주 배경

- 2차대전 수행을 위한 교토군비행장 및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해 1941년 이후 동원된 일본 내 거주 중의 조선인과 그 후손 및 친척(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타인에 의해 끌려온 경우 등 반강제적 동원으로 볼 수 있음. 한일합방의

불법성과 전시체제라는 맥락에서 모두 강제동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 1945년 이후 일본정부 및 GHQ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탄압과 배제 정책 실시에 따라 일본사회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부적응자가 같은 민족이 거주하는 집단 마을로 유입됨과 동시에 재일조선인들의 저항과 생존권 및 각종 인권 투쟁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왔음
- 결국, 우토로의 조선인 집단 거주 의 원인은 첫째,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수행, 둘째, GHQ 및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의 조선인 차별과 배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4. 우토로 토지문제의 개요

- 1945. 8 1,300여명의 조선인 노무자와 가족이 방치됨
- 1945. 일본정부, 일본국제항공공업에 토지 불하
- 1987. 3 닛산차체(일본국제항공공업의 후신)가 주민과 상의없이 부동산 회사 서일본식산에 토지 매각
- 1989. 2 서일본식산이 ‘건물수거 토지명도’ 소송 제기
- 2000. 일본 대법원 주민들의 항소 기각, 강제철거 확정
- 2004. 1 등기부에 토지소유주가 서일본식산에서 개인으로 변경
- 2005. 4 우토로 정내회(주민회)가 노무현대통령에게 서간 작성 전달
- 2005. 5 토지소유권자 한국정부에 55억 제시, 9월에 강제철거 혹은 전매할 예정임을 밝힘
- 2005. 6 한국 ‘우토로국제대책회의’가 토지확보와 역사보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개시
- 2005. 7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우토로정내회(주민회)’가 모금캠페인 개시  
서일본식산의 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불인정 항소 계쟁 중

#### 5. 우토로 문제의 성격

- 일본 정부 및 군수 기업의 전쟁 책임(전후보상)의 문제
- 일본 정부의 조선인 차별과 배제 문제, 행정적 방치의 문제
- 한국 정부의 한일협정의 문제
- 한국 정부의 자국민 방치라는 국가적 의무 포기의 문제
- 강제철거 및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의 문제
- 토지 소유권의 문제(현 소유권자의 스폰서는 일본 우익정치가일 가능성 큼)

#### 6. 우토로 문제 해결 방안

- 본질적으로는 일본정부 및 군수기업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의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추진해야하는 문제이나,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강구하지 않고

있음. 우선은 강제철거의 위협을 먼저 제거하고 우토로주민의 불안 해소와 공동체 유지가 급선무로 판단됨

- 마을 형성의 역사적 경위와 60여 년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 역사를 볼 때, 우토로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와 평화의 마을로서의 정착이 우토로 문제의 미래지향적 해결로 보여짐
- 강제철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토지확보 및 역사보전을 위한 모금이 이미 한국 국민과 우토로 주민에 의해 시작됨(주로 공유지와 경제력이 전혀 없는 세대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모금)
- 한국 정부의 모금 부족분에 대한 총당 요청(우토로주민회가 대통령과 주요사카총영사에 대한 서간을 통해 이미 요청했음)

## 7. '역사와 평화 마을' 구상 및 효과

- 함바와 우물 등 역사적 상징물 보존, 역사와 평화 기념관 건립(재일동포역사 중심)
- 한국과 일본 시민, 재일동포, 기타 외국인이 역사와 평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장소
- 민단과 총련의 화해와 화합을 이끄는 장소(이미 우토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부 레벨이나 민단과 총련의 공동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효과가 주목됨)

※ 조선인 집단마을로 유사한 토지 문제를 겪은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꼽히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의 토지구입과 토지 성격(국유지)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처에 의해 해결되었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이케가미지구는 90년대 이후의 한국인 뉴커머와 혼주하고 있고 소유주의 강제철거 위협은 없는 상태로 역사적 상징성과 현실적 위기 상황이 우토로만큼 명백하지 않고, 도쿄의 에다가와 민족학교의 경우는 현재 재판 중으로 승소가 예상되고 있음(유사지역: 가와사키시이케가미지구, 교토히가시9조(0번지), 서경구 가즈라마에후케초, 오사카 다치소, 효고현 나카무라지구)

### <2005년 9월 25일 우토로 방문기>

9월 27일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고 허둥지둥 비행기표를 구하고, 대형 현수막을 만들고, 촛불집회용 촛불을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일본의 시민단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으로부터 강제철거 집행이 중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단 모두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지만 강제철거 반대 집회는 예정대로 참가하기로 하고 한국의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실무자 몇 명만이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있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떻게 그 분들을 다시 봐야 할지 막막했다. 지금 당장 우토로 땅을 살 수 있는 만큼 성금이 모인 것도 아니고, 더구나 강제철거는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드릴 수 있을지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러나 우토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고, 9월 25일 강제철거 반대집회를 통해 우토로를 사수하겠다는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강제철거 반대집회는 일본 전국에서 모여든 일본시민들과 재일동포, 지역 신문사 기자들의 참가로 이루어졌다. 주인공인 우토로 주민들은 파란 띠를 머리에 동여매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국에서 온 우리들과 일본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주민회 김교일 회장은 주민들의 단결만이 이 험난한 길을 뚫고 갈 수 있다고 외치면서 참가자들에게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호소하였다.

‘강제집행 공사가 있는 직후부터 공포와 불안으로 병석에 누운 1세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부터 분노가 밀려옴을 느낍니다. 왜 우리들 재일조선인이 여기 우토로에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은 투쟁하고 있습니까? 일본에 의한 침략, 전쟁이 없었더라면 우토로는 생겨나지 않았습시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들 조선민족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분노로 몸이 떨려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인간으로서 같은 취급을 받고 싶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우토로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세들이 일구어낸 이 우토로 땅을 끝까지 지켜내고, 우토로가 우리들 조선반도와 일본 사이의 불행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극복하는 그러한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집회의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는, 실제로 강제철거가 들이닥쳤을 때를 대비한 철거 저지예행연습에 들어갔다. 호루라기의 구령에 맞춰 우토로 바깥과 연결된 가장 큰 길을 사람들로 빼곡히 채우는 연습이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주민, 일본시민, 지역 민단과 총련, 한국의 대책회의 등 400여명이 하나가 되어 강제집행관과 철거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 큰 길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우토로 아버지 한 분이 ‘이 숫자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강제철거가 일어날 때에는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 불러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1세 할머니들은 ‘강제철거가 일어나면 우리 노인들이 맨 앞에 설 테니까 젊은 너희들은 뒤에 서라’ 고 우토로 젊은이들에게 몇 번이고 당부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날, 마침 우토로 주민회 회의가 있었다. ‘지키는모임’ 으로부터 강제철거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이 있었다. ‘마을 전체는 2시간 만에 모두 철거될 수 있고, 만약 집행관이나 업자에게 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공무집행 방해로 유치장에 끌려가 최소 3박4일은 있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우토로 자문 변호사 이름을 기억해둘 것’ 등이었다. 우토로 동포들의 얼굴은 긴장과 각오로 뻗뻗했다.

반대로 우토로의 땅을 구입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주민회 부회장 엄명부씨는 한국정부가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 대한 공개답변서에서 제시한 우토로에 대한 지원 조건(현재의 토지소유권 재판의 종료, 토지가격의 결정, 주민들의 마을 개발 계획서, 토지소유권 결정, 이상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우토로 토지가 확보된다면 그 후 우토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우토로 문제에 소극적인 민단 중앙에 대해서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자고 증지를 모았다. 민단 중앙은 이번 26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갈 것을 약속하였다.

우토로는 정말이지 위기와 희망 사이에서 멀고 먼 길을 돌아오고 있다. ‘강제철거냐, 토지협상이냐’ 우토로는 현재 진행 중인 전 소유권자와 이노우에 마사미 현 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재판 판결이 나는 11월 9일 1시 30분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어느 쪽이 소유권자가 되든 우토로 주민이 우토로의 주인일 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우토로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것이 벅차기만 하다. 재일동포 조직, 한국정부, 한국 시민, 일본 시민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지원만이 우토로를 살릴 수 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11월 9일까지 모금캠페인을 계속 추진하고 동시에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토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일본정부의 원죄와 닛산의 전쟁책임 및 일방적인 전매 책임은 ‘우토를 지키는모임’과의 연대를 통해 계속적으로 물어갈 것이다.